‘서남해안권 발전 구상’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세계적 복합관광 단지·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무안에 대형 복합 쇼핑·건강휴양 단지 조성
목포 신외항 크루즈 부두·섬 리조트 건설
2016년 무안·목포권 제조업 생산 16조원

국토 서남권의 면모를 일신할 ‘서남해안 발전 구상’(무안·목포 성장계획)은 ▲세계적인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서남해안 물류거점 육성 ▲신재생 에너지 보급기지 조성 ▲지역 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무안에 대형 복합 쇼핑단지를 만들고 건강휴양단지를 조성해 무안권을 쇼핑·휴양 거점으로 만든다. 중국 상하이권과 국내 남부권 소비층을 타깃으로 2007~2009년 명품과 의류잡화, 디지털 가전이 주류를 이루는 복합 면세쇼핑단지를 설립하고 청정 해양·자연환경을 활용한 건강휴양단지를 개발한다.

같은 시기 목포 신외항에에 5만t급과 8만t급 크루즈 전용 부두 및 여객선 터미널을 건설한다. 다도해를 묶는 ‘환상섬 복합리조트를 만들어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삼는다. 이같은 구상이 완료되면 무안·목포권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제주를 연결하는 테마관광벨트가 조성된다.

◇서남해안 물류거점 육성=오는 2008년 개장할 예정인 무안국제공항과 목포신외항을 활용해 서남해안 물류거점을 조성한다. 무안공항은 고부가 농산물·제조부품 물류지원 기능을 맡도록 하며, 2007~2008년 무안에 수출농산물 유통물류단지를 건립한다. 이 곳에서는 전남산 농산물과 화훼류를 일본, 중국, 동남아로 수출한다.

목포 신외항은 배후 산업단지의 수출입 관문으로 활용되며 철강 등 기초소재와 가공·물류센터를 조성한다. 목포 신외항에는 국제여객 터미널을 건설해 대중국 전라상권의 무역·여객항으로 특화 발전시킨다. 이와함께 목포 신외항과 장성의 호남복합물류단지의 연계로 국내 물류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향후 새만금지역까지 개발효과가 파급되도록 한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기지 조성=무안권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및 풍력·수소전지 기반을 활용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무안 기업도시와 남악신도시, 나주 혁신도시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한다.

대불산단을 포함한 목포권에는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생산시설을 집적하며 신재생에너지 부품 소재 연구개발 단지센터를 설립한다.

◇지역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무안권을 수출농산물 및 국제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청정·유기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무안공항 및 지역농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 복합농공단지를 건설한다.

목포권에는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하는 등 지역 산업기반을 고도화 한다. 또 대불 자유무역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를 간소화해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또 웰빙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세라믹산업 종합 지원센터, 석재유통·가공단지도 들어선다.

◇지역 경쟁력 극대화=발전구상이 실현되면 무안·목포지역은 자족형 중핵도시로 거듭 난다. 구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16년 무안·목포권의 인구는 54만여명으로 늘고, 제조업 생산은 16조원으로, 제조업 고용은 5만 6천여명, 서비스업 고용은 14만 9천여명으로 증가한다.

발전구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무안·목포권은 새만금과 장성, 광주 및 J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해남·영암,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를 연결해 환황해 시대의 신산업 허브기지로 거듭 나게된다.

◇노대통령 각별한 애정=노무현 대통령은 이 구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발전구상을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을 조금이라도 분산시켜 지방을 발전시키고자하는 균형발전 과제로서 프로젝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강조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오랫동안 해보려고 했던 뜻있는 사업이니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이번엔 추진력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남해안권 발전구상 개요도

“강남 부자들에 보조금”
“정부여당 뼈아픈 과오”

정동영·천정배 부동산정책 비판

열린우리당 창당주역인 정동영 전 의장과 천정배 의원이 일제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자성과 함께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당내에서는 여권의 대권주자군인 두 사람이 정계개편론이 진행중인 와중에 사실상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부동산정책에 마저 쓴소리를 한 것을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확실한 선긋기 시도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천 의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자신이 개최한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좌절과 허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부여당의 가장 뼈아픈 과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당이 앞장서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잘 협력하고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 주도론’을 적극 제기했다.

정 전 의장도 16일 중앙대 강연에서 “강남 집값 잡기는 강남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준 결과가 됐다. 이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성찰이 모자랐다”며 강남 집값 잡기에 초점을 맞춰온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또다른 창당주역인 신기남 전 의장은 “참여정부만 비판할게 아니라 당도 공동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정부와 당이 별개라는 식으로 구분할 순 없는 일”이라고 ‘당정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며 걸었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의원들 한나라 설득에 넘어가”

‘전효숙 인준안’ 처리 무산…민주당 비난 확산
한나라 대변인 “민주당 성향 한나라와 가까워”

여야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오는 30일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국회 표결 처리를 외면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설득에 민주당 의원들이 넘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민주당의 성향은 실제로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에 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오는 30일 이후 논의하자는데 합의하고 상임위별 인사청문회와 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도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본회의장 단상 점거를 중단했고 의사 일정에 복귀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출입 광주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여권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 등을 통한 정계개편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성향은 열린우리당보다 한나라당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보면 대개가 한나라당의 중도 보수 성향과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감정 등을 고려해서라도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의 정계개편에 나서기보다는 한나라당과의 연대나 통합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처리를 외면한 것은 한나라당의 설득이 주효한 측면이 크다며 소위 ‘한-민(한나라당·민주당) 공조’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이번 인준안 처리 무산 배경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설득에 넘어갔다는 얘기들이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민주당에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만약 전 후보자가 대구·경북 출신이었다면 한나라당이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겠느냐”며 “전 후보자가 법조계의 마이너 그룹인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인준안 무산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설득에 넘어가 전 후보자 인준안 표결 처리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전 후보자가 전남 출신이고 여성이라는 점에서 고민했으나 헌법재판소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데다 이러한 상처를 입고서 헌재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69% “부동산값 계속 오를 것”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여론조사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 지난 14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8.5%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2%에 그쳤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수도권, 충청권, 20대,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부산.경남(PK)지역, 50대 이상, 저학력, 주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KSOI는 밝혔다.

부동산정책 책임론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94.9%가 정부.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적 평가가 11.0%에 그치고 부정적 평가는 79.9%에 달해,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핵위기 당시인 지난달 24일 조사결과보다 긍정적 평가는 1.9% 포인트 하락하고 부정적 평가는 4.8%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연합뉴스